

북한의 후계체제와 김정일 정권 이후 북한의 정치체제 전망

박후건(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부교수)

1. 들어가면서

북한은 2010년 9월 28일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를 열었다. 세간의 관심과 주목은 역시 김정일의 3남인 김정은에게 맞추어졌다. 이러한 뜨거운 관심에 보답이라도 하듯 북한은 28세에 불과한 김정은을 당대표자회의 전날에는 인민군 대장에, 당대표자회의 당일에는 당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하였다. 대부분의 남한 언론과 미국을 비롯한 서방 언론은 이를 김정은이 김정일의 후계자로 결정되었음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또한 언론은 같은 해 10월 10일 북한이 이례적으로 생중계한 조선로동당 창건 65주년 기념일에 김정은이 김정일과 함께 열병식 주석단에 올라 처음 군부대의 열병 신고를 받음으로써 김정일의 후계로서의 위치를 다시 한 번 대외에 알렸다고 보도하였다.

이러한 김정일의 후계자로서 김정은에 대한 논의와 주장이 종합적

으로 시사하는 바는 북한의 정치체계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 체제와는 거리가 먼 봉건왕조와 가깝다는 사실이다. 언론이 바라보는 ‘후계자 논의’의 핵심은 ‘왕’인 김정일의 건강이 악화되고 그의 물리적 생명이 별로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의 아들 중 나이는 가장 어리지만 김정일과 성격적으로 가장 닮은 김정은을 ‘세자’로 책봉하였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대다수 언론과 북한 외부의 시각대로 과연 북한의 정치체제를 봉건왕조와 동일시할 수 있을까?

북한은 수령체제라는 독특한 정치체제를 가지고 있다. 또한 김정일과 수령체제는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김정일이 김일성을 수령으로 만들고 체제를 확립하며 정착시켜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만약 김정은이 단지 김정일의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 후계자로 내정되었다면, 이것은 북한이 자신들의 독특한 정치체제인 수령체제에서 현대판 봉건왕조체제로 전환하였음을 의미한다. 물론 그 전환은 역사의 시간을 되돌리는 행위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만약 북한이 수령체제에서 어떤 다른 체제로 전환 중이라면 사정은 달라진다. 김정은의 후계자 내정을 ‘봉건왕조체제로의 전환’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간단히 규정할 것이 아니라, 이 같은 맥락에서 김정은의 부각이 지닌 의미를 세밀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김정은이 인민군 대장과 당중앙위원회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2010년 9월 28일의 당대표자회는 북한 정치체제의 일대 전환점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김정일이 확립한 수령체제의 형성과 특성을 재조명하는 동시에 북한 정치체제의 전환점으로서 제3차 조선로동당대표자회의의가 갖는 의미를 찾는 데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북한의 정치체제의 변화에 대한 전망도 하려 한다.

2. 김정일 후계체제와 김일성 유일지도체제 그리고 후계자론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조선노동당 제6차 당 대회를 통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공식화하였다. 김정일 후계자 공식화는 김정일이 김일성의, 즉 수령의 후계자로서의 확고한 입지와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에 따라 제6차 당 대회에서는 김정일에 의해 정식화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당의 총적 임무로 확정되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원칙을 당사업의 지침과 과거 당의 기본이념으로 삼았던 것에서 주체사상으로 대체되었다.¹⁾ 또한 정치위원회는 정치국으로 개편되었으며 정치국, 비서국, 그리고 군사위원회 등 당내 3대 권력기구에 모두 선출된 사람은 김일성과 김정일 두 사람뿐이었다.²⁾ 김정일은 김일성의 장남이라는 매우 유리한 조건 속에서 김일성과 그의 항일빨치산세력의 지지를 받으면서 정치를 시작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의 역량을 바탕으로 당내에서 유일사상체제를 확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였으며, 노동당을 중심으로 군(軍)과 정(政)을 유일지도체제로 묶어내었다. 김정일은 스스로 후계자감임을 증명하고 자신을 김일성의 유일후계자로 만들어갔다. 이것은 또한 김정일이 16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북한을 김일성 수령체제로 묶어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결국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갖는 정당성은 김일성의 장남이었기보다는 북한이 김일성 수령체제로 되어가는 과정에서 김정일의 주도적 역할과 기여라고 할 수 있다.³⁾

1) 『로동신문』, 1980년 10월 11일.

2)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127~128쪽.

김일성의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김정일은 자신의 입지를 적극 활용하여 북한사회를 더욱더 완벽한 수령제사회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 여기에 분기점이 된 것은 ‘혁명적 수령관’과 이에 따른 ‘사회정치적 생명론’이다. 김정일은 1986년 7월 15일 당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에서 수령과 당 수령과 대중, 당과 대중의 관계뿐만 아니라 수령·당·대중이라는 프롤레타리아 독재체계 속에서 수령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인민대중의 최고의 뇌수이며 통일 단결의 중심이며 자주성을 위한 혁명투쟁의 최고 령도자⁴⁾”로 규정하였다. 즉, 수령은 인간 유기체의 모든 활동을 조절·통제하는 뇌수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다. 결국 수령은 혁명과 건설과정에서 절대적 지위와 결정적 역할을 차지하므로 이러한 수령을 따르기 위해서는 “수령을 절대화하고 무조건 받드는 견해”와 그에 따른 관점, 자세와 입장,⁵⁾ 즉 ‘혁명적 수령관’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혁명적 수령관에 의해 수령은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부여받은 존재가 된다.⁶⁾ 이렇게 ‘혁명적 수령관’을 규정한 김정일은 이것을 수령·당·대중의 통일체에 적용하여 당과 대중, 각각의 역할을 재규정하면서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정립한다.

김정일은 “인민대중들이 사회정치적 생명체로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당 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⁷⁾”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인민대중

3) 박후건, 『유일체제 리더십: 잭 웰치, 이견희, 김정일 리더십의 비밀』(서울: 선인, 2008), 230쪽.

4)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1986.7.15), 『김정일선집』, 8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8), 448쪽.

5)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00쪽.

6) 정열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5), 85쪽.

은 “당과 운명을 같이” 해야 하는데 당이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증추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즉, 인민대중이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의 영도⁸⁾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정치적 생명체론’은 결국 지금까지 이상화되었던 김일성이 육체적 인간에서 영생을 줄 수 있는 ‘신’, 즉 신격화된 것이다. 이것은 북한이 북한식 전체주의 국가(totalitarian state)에서 북한식 신정국가(theocratic state)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체론’ 이후 김정일은 여기에 민족주의담론⁹⁾까지 끼어 맞추어 북한을 더욱 강도 높

7) 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448쪽.

8) 김정일은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증추’인 당의 영도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당은 수령을 중심으로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하게 결합된 인민대중의 핵심부대로서 자주적인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증추를 이루고 있습니다. 개별적인 사람들은 당 조직을 통하여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 조직·사상적으로 결합되어 당과 운명을 같이하게 될 때 영생하는 사회정치적 생명을 지니게 됩니다. 사람들은 당 조직과 당이 령도하는 사회정치조직의 한 성원으로서 조직사상생활에 적극 참가함으로써만 사회정치적 생명체의 중심인 수령과의 혈연적인 령계를 공고히 하고 자기의 사회정치적 생명을 빛내어 나갈 수 있습니다”(김정일, “주체사상교양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 440쪽).

9) 대부분이 공산주의자들이었던 북한지도부는 북한 국가형성 초기 민족주의를 전면적으로 내세우지 않았다. 이들은 소련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회주의 애국주의를 도용하여 증산운동에 도움이 되는 차원에서 민족주의를 정리하고 활용하였다. 그러나 1972년 수령체제의 제도적 기반인 주석제와 주체사상이 헌법 개정으로 북한의 주된 정치체제와 국가지도이념으로 채택되고 수령체제가 당·군·정 뿐 아니라 일반국민에게 확산하려하자 민족주의를 재해석하고 수령체제의 확산과 정착을 위해 적극 활용한다. 김정일은 1986년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것을 들고 나오면서 이전의 소극적인 민족주의입장에서 매우 적극적인 민족주의입장으로 선회한다. 그러나 북한의 민족주의 담론은 수령체제를 문화적으로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이다(박영자, “분단 60년, 북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48호(2005), 226~227쪽). 북한의 민족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사회주의 대가정체제는 수령체제를 일반주민들에게 확산시키는 기제로서 역할을 하는 한편,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문화적인 측면에서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하였다. 북한은 1996

은 신정국가화하는 데 역점을 둔다. 김정일이 북한을 이토록 완벽한 수령제사회로 만들기 위해 역점을 두었던 것은 전체 북한을 수령을 중심으로 ‘일치단결’시켜 북한(그들 시각에서 그들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적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북한이 상정한 적은 다름 아닌 미국이었다. 미국을 북한의 역량을 초월하는 세계초강대국으로 간주하면 할수록 김정일은 더 큰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북한에서 ‘후계자론’¹⁰⁾은 김정일이 김일성 후계자로 공식화된 이후 작성되었다. 즉,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기 전에 나온 것이 아니라 김정일이 후계자가 된 후에 나온 것으로 김일성 후계자로서 김정일을 정당화시키는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후계자론’은 수많은 권력승계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유추해 낼 수 있는 법칙과 질서를 가지고 만든 이론이 아니고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의 경험과 특성을 바탕으로 김정일에 맞추어 작성된 특수한 이론이다.

그러므로 ‘후계자론’은 일반적인 또는 순수 이론이라기보다는 김정일이 후계자가 되는 과정 속에서 김정일의 행적과 경험을 정당화시켜 주는 글이다. 즉, 당시 김일성의 후계자인 김정일뿐 아니라 앞으로 나올 후계자들에게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기보다는 김정일이 수령인 김일성이 지도하는 유일체계에서 후계자가 되어온 과정과 경험을 정리하여 만든 것이 ‘후계자론’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적용될 수 있

년 자신들을 ‘김일성민족’이라고 규정하기에 이르고, 1998년 개정된 헌법을 ‘김일성헌법’으로 명명하였으며 김일성을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로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김일성의 출생연도인 1912년을 ‘주체연호’의 기준 연도로 설정하고 이후의 모든 기록물에 대한 표기에서 주체 연도를 같이 표기하고 있다. 이승열,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와 ‘수령승계방식’의 한계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141~143쪽.

10) 북한에서 나온 대표적인 후계자론에 대한 서적은 김유민의 『후계자론』과 김재천의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이 있다.

는 내용이 있다하더라도 수령의 유일지도체제라는 제도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후계자론’은 김정일이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북한에 수령체제를 수립하여 당·군·정이라는 상부구조뿐 아니라 전 국민적으로 확산시키는 특수한 과정과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의 ‘후계자론’에서는 후계자의 중요성에 대해 “수령의 혁명위업을 옹계 계승 완성해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 하는 문제는 결국 수령의 후계자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데 그 운명이 달려있다”¹¹⁾고 한다. 그러므로 후계자는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요구되는 요건을 충족해야만 될 수가 있다. 후계자론에서는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최고의 높이에서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¹²⁾를 가장 중요한 요건으로 설정하고 있다. 여기서 충실성은 수령이 내놓은 사상과 수령이 이룩한 혁명위업에 대한 충실성을 가리키며 이것은 곧 수령이 내놓은 노선과 정책의 관철을 필생의 과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요건은 김정일에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다. 김정일은 자신이 노동당에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당시부터 김일성의 사상인 ‘주체사상’을 현실에서 이론의 제공권을 확보하며 체계화시켜나갔다.¹³⁾

‘후계자론’에서 후계자의 다음 요건으로 “후계자는 반드시 수령의 혁명사상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그것을 더욱 발전·풍부화시킬 수 있는 사상적·이론적 예지를 지녀야 한다”¹⁴⁾라고 되어있는데 김정일은 김일성의 ‘주체사상’을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대체하는 김일성주의로 그리

11) 김유민, 『후계자론』(서울: 신문화사, 1984), 72쪽.

12) 위의 책, 73쪽.

13) 박후건, 『유일체제 리더십: 책 웰치, 이견희, 김정일 리더십의 비밀』, 222쪽.

14) 김유민, 『후계자론』, 76쪽.

고 여기에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을 더해 이론적 완결성을 주도하였으므로 이 요건에 부합하다. 다음으로 ‘후계자론’은 “수령이 창조한 탁월한 영도예술, 혁명적인 영도방법을 완벽하게 체현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김정일의 처음 영도사업을 시작한 것이 영화예술부문임을 고려할 때 김정일에게 맞추어져 있다. 마지막으로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있어야 한다”¹⁵⁾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70일전투’와 ‘붉은기쟁취3대소조운동’ 등 대중운동을 발기하고 이러한 대중운동에서 현지지도를 통해 인민의 지도자¹⁶⁾로 추대되는 형식을 연출했던 김정일에 역시 맞추어진 요건이다.

세 가지 조건을 종합하면 결국 후계자란 수령의 영도를 현실에서 완성해 나가는 유일지도자를 말한다. ‘후계자론’은 당의 유일지도자로서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에서 규정된 당의 영도(탄)를 통해 혁명적 수령관을 현실에서 실천하며, 그를 통해 사회정치적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정당화시킨 논의로서, 김정일만이 후계자의 입지와 요건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시한 것에 불과하다. 이와 같이 ‘후계자론’은 일반적으로 적용 가능한 이론이라 할 수 없으며, 김일성의 후계자로서 김정일만 적용할 수 있고 유용한 것이다.

‘후계자론’에서는 후계자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첫째, 수령의 혁명사상을 고수관철하고 발전·풍부화시키는 것이다. 둘째, 수령을 진심으로 받들고 수령의 사업을 최고의 높이에서 보좌하는 것이다. 셋째, 근로인민대중을 옹계 조직·동원하여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것이다.”¹⁷⁾ 후계자론에서

15) 위의 책, 77쪽.

16) 이관세, 『현지지도를 통해본 김정일의 리더십』(서울: 전략과 문화, 2009), 180~181쪽.

정의된 후계자의 역할은 김정일이 후계자로서 이룩해야 되는 일을 정리한 것이다. 첫 번째 역할을 분석하여 보면 김일성이 만들어 놓은 혁명사상, 즉 주체사상의 바탕에서 김정일의 독창적인 사상이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놓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역할은 후계자로서 김정일이 수령인 김일성과 같은 위치에서 북한을 통치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세 번째 역할을 문구대로 해석하면 김일성 사후 후계자인 김정일이 김일성의 유훈을 자신이 살아있는 동안 이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해석은 마치 ‘개의 꼬리가 개를 흔드는(tail wagging the dog)’ 격이 될 수 있지만, 수령체제를 합법칙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북한에서 그들 스스로 명시한 것, 특히 후계자의 역할과 같은 중요한 사항은 쉽게 무시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만약 이러한 것이 부정된다면 또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후계자론 그리고 나아가서 수령체제 역시 북한에서 정당성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이다.

후계자의 요건과 역할을 정의하고 규정하는 후계자론이 담고 있는 가장 중요한 내용은 김정일만이 김일성의 후계자가 될 수 있다는, 즉 김일성의 유일 후계자는 김정일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후계자인 김정일이 수령인 김일성의 사후 수령이 될 수 있는가? 이다.

김일성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으로 신격화되었다. 그리고 북한은 김일성의 신권으로 통치되는 신정국가화되었다. 김일성의 신격화를 이끈 인물은 김정일이다. 김정일은 김일성 수령의 후계자로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현실에서 유일지도자로서 완수하여야 하는 과업을 가지고 있어 수령의 지위와 수령의 역할을 계승하는 것이어서,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이 수령의 지위와 역할과 다를 수 없지

17) 김유민, 『후계자론』, 68쪽.

만 이미 ‘신’의 지위를 차지한 김일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김정일은 단지 수령의 후계자이지 수령 그 자체가 될 수는 없다.

이는 마치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며 그리스도교 조직을 현실에서 만들었던 사도 바울과 예수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바울은 그리스도교가 종교로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데 가장 결정적이고 중요한 역할¹⁸⁾을 한 인물이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와 같이 신격화될 수 없었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구세주인 예수로부터 자신의 모든 정당성을 찾았으며 예수의 복음을 바탕으로 그리스도교를 만들어갔기 때문이다. 바울이 신이 된다는 것은 예수를 부정하고 다른 종교를 만드는 것과 같으며 예수의 사도로서의 길을 간 바울로서 자신의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김정일도 후계자로서 자신의 모든 정당성을 수령인 김일성으로부터 찾았으며 김일성을 신격화하였다. 김정일은 사도 바울처럼 신이, 즉 수령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 등을 고려하여 보았을 때 ‘후계자론’이 의미하는 바는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이며 김일성의 후계자, 즉 수령의 후계자는 김정일로 끝난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의 수령체제는 유일사상과 유일지도체제를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유일신교인 기독교와 이슬람과 많은 유사점이 있다. 기독교와 이슬

18) 바울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교의를 전하려는 열정으로 아프리카(북아프리카) 지역을 제외한 로마제국의 주요도시를 돌아다녔다. 무려 20,000km에 이르는 거리를 돌아다니던 그의 선교여행과, 신약성서 27개의 문서 중 13편에 달하는 그의 이름으로 된 서신들은 초대 교회사에 있어서 기념비적인 업적이다. 바울로는 그리스도교의 최대 전도자였고 또한 최대 신학자였으며, 오늘의 그리스도교가 있게 한 그리스도교 형성사상 가장 중추적 인물이다. 그리스도교의 신학은 그에 의해서 틀이 잡혔으며 후세에 끼친 영향은 헤아릴 수가 없다. 네이버 백과사전: http://100.naver.com/100.nhn?docid=68853&dir_id=020401(접속일자: 2010년 10월 7일).

람은 각각 예수와 모하메드와 같은 신의 아들 또는 선지자와 같은 신성한 존재가 신을 대변하고 이후 이들의 사상은 사도와 추종자들에 의해 제도화된 계층적 기관(교회, 모스크)으로 조직화된다. 이후 각각의 종교는 집단적 지도체계(교황체제, 교단체제)로 운영된다. 북한에서 김일성은 수령체제의 원천(the source)이며 신격화되었다. 김정일은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하며 이들의 저작선집 또는 어록은 성경·코란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노동당은 제도화되고 계층적 통치조직 기구로서 교회·모스크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수령체제와 유일신교와의 이러한 유사점은 북한의 체제가 종교적 성격을 강하게 갖고 있기 때문으로만 해석되기보다는 유일사상 그리고 유일사상을 바탕으로 하는 조직화가 갖는 유사점에서 해석을 찾아야 할 것이다. 김일성의 사상을 유일사상으로 만들고 김정일을 신격화한 김정일은 마치 유일신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도나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한 것이며 선지자적 역할의 의미에서 수령의 후계자이다. 다시 말해 김정일 자신이 수령이 될 수 없으며 김정일의 역할은 유일신교에서의 사도나 선지자와 유사한 것이 된다. 이것은 왕조에서 왕의 후계자로서 세자(世子)가 왕의 사후(死後) 왕의 위상과 성격을 그대로 이어받고 왕의 자리에 오르는 왕조적 승계(承繼)와는 매우 다른 것이다.

3. 당 유일지도체제 복귀와 경제강국 건설

김정일은 김일성이 생을 마감하는 1994년 7월까지 조선로동당을 유일사상체제로 묶고 강화하는 가운데 당의 영향력과 통제력을 군과

정, 북한 인민 모두에게 확산시켰으며, 당 조직을 통해 북한의 유일지도체계를 세우고 유지시켰다. 김정일이 1964년 4월부터 당에서 사업을 시작하였으니 30년 동안 당을 중심으로 유일사상체계에 기반을 둔 북한 조직화 사업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김일성 사후 소위 ‘고난의 행군’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게 되면서 선군정치가 시작되었다. 당시 북한의 몰락과 붕괴는 시간문제인 것처럼 보였다. 사회주의권이 붕괴되면서 북한에 대한 외부의 군사적 압박은 더 가중되었다. 제1차 걸프전쟁 이후 미국은 새로운 세계질서를 구축한다는 목적으로 북한, 쿠바, 이란, 리비아, 시리아 등 반미적인 국가들을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선군정치는 이 같은 상황을 배경으로 가동되기 시작하였다. 즉, 고난의 행군이라는 생사존망의 위기를 관리하고 미국의 군사적 압박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 ‘선군정치’인 것이다.

선군정치가 처음으로 공식화된 것은 1997년 10월 7일 조선중앙방송이었다. 방송은 정론을 통해 “경제사정이 아무리 부담이 크다 해도 선군후로(先軍後勞)하라!”고 독려했었는데 이후 북한 문헌은 ‘선군후로’, ‘선군정치’에 관한 글과 해석으로 홍수를 이루며 ‘선군’의 합법칙성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다. ‘선군정치’의 사상적 기반인 ‘선군사상’은 2009년 북한헌법개정에서 주체사상과 더불어 북한의 움직임은 사상으로 또 김정일 시대의 철학으로 자리매김한다. 그러나 주체사상의 창시자로서 김일성과 선군사상의 창시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은 같을 수 없다. 오히려 선군사상은 수령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의 위상을 확인시켜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선군사상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개정헌법에서 분명히 하고 있으며, ‘후계자론’에서 후계자의 첫 번째 역할이 주체사상에 기반을 둔 새로운 철학의 생성을 명시해 두

기 때문이다.

‘선군정치’를 위해서는 우선 군대 예산을 늘리고 군수산업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경제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을 때 비생산적인 국방에 예산을 편중시키는 것은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생필품과 관련된 민수 경제에 대한 북한 당국의 투자가 극소화되자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노동당 조직은 밑바닥부터 와해되고 있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을 떠나 이곳저곳으로 식량을 찾아 떠돌아다녔으며 이러한 주민들의 유동성이 증가하자, 주민들의 조직생활이 이완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주민생활총화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하였다.¹⁹⁾ 주민들이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당의 사회 장악력은 급격히 떨어지게 된 것이다. 또한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된 상황에서 주민들이 살기위해 자연발생적으로 생겨난 시장²⁰⁾은 노동당 조직의 통제가 약화되고 축소되면서 확대되어 무정부적인 상태²¹⁾로 가고 있었으며 당 조직은 밑바닥부터 와해되고 있었던 것이다.

김정일은 체제 수호뿐만 아니라 당과 정부, 주민의 이완된 사상의 재강화 등 체제를 안정, 재강화하고 나아가서는 사회경제 발전을 추동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조직으로 군을 주목하고, 군을 “혁명의 주력군,” 또는 “강성대국 건설의 주력군”으로 하여 혁명의 주체역량을 재편하였던 것이다. 즉, 김정일은 선군정치를 내세워 군을 혁명의 주력군으로서 혁명의 주체 역량을 조직 사상적으로 통일 단결시키고, 혁명

19)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296쪽.

20)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공(公)과 사(私): 이론화를 위한 비교,”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122~123쪽.

21) 김정일,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12.7), 『월간조선』, 4월호(1997), 308쪽.

과 건설을 맨 앞에서 추진해 나가면서 다른 사회적 집단을 고무 추동하는 핵심 집단으로 지목하고 북한의 총체적 위기를 돌파하려 하였던 것이다.²²⁾ 그러나 선군정치는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비상체제이지 지속 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위기가 일정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거나 위기를 벗어나면 북한은 기존의 방식으로 복귀하여야 한다.²³⁾

현재 김정일과 북한을 움직이는 것은 김일성의 유훈이다. 김일성의 유훈은 김일성 사후 북한을 움직이는 지침이며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해왔다. 북한은 그 동안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하나도 놓침이 없이 다 틀어쥐고 철저히 관철하기 위해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유훈교시의 과업을 완성해야 한다²⁴⁾”고 주장하여 왔다. 결국 이것은 김정일의 통치기반의 제도적 토대가 ‘유훈통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1999년 북한은 ‘강성대국’이 김일성이 남긴 최대의 유훈²⁵⁾임을 공식 발표하였다.²⁶⁾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엄수하여 향후 사상·정치·군사강국의 기반하에 경제강국을 이룩하여 명실상부한

22)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331~332쪽.

23) 이 점은 김정일의 다음 지적에도 확인된다. “군사명령 지휘체계로 군대는 움직일 수 있어도 수백만 대중은 움직일 수 없다. 광범위한 군중을 조직 동원하는 것은 당이다”[김정일, 『김정일선집』, 13권(평양: 조선노동당출판사, 1998), 437~438쪽].

24) 『로동신문』, 1995년 7월 6일.

25) 북한은 ‘강성대국 건설’이 김일성의 최대유훈이며 이밖에 ‘조선반도(한반도) 비핵화’, ‘조국통일’이 김일성의 유훈이라고 한다.

26) 북한은 1999년 1월 1일 당보, 군보, 청년보 공동사설을 통해 강성대국에 대한 김정일의 보다 구체적인 구상을 소개하였다. 여기서 김정일은 김일성의 유훈교시를 철저히 엄수, 향후 사상·정치·군사강국의 기반하에 경제강국을 건설하여 명실상부한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 한 담화, 1999.1.1), 『김정일선집』, 14권(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2000), 452쪽.

강성대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상·정치강국이란 김일성이 창시하고 김정일이 체계를 세운 주체사상과 노동당유일지도체제를 속에서 북한을 일치단결체제로 묶어내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군사강국은 미국과 외부의 압력과 위협에 맞설 수 있는 군사력과 군사적 능력을 가리킨다. 북한은 사상·정치강국은 유일사상체계 틀에서 유일지도체제를 만들어냄으로써 완성되었다고 평가하며, 군사강국도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제조능력을 제고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되었다²⁷⁾고 본다. 경제강국 건설은 국방에 치중되어 있는 투자를 다른 경제 분야에 돌리고 경제를 정상화시키면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룰 때 가능하다. 이러한 경제 정상화 그리고 나아가서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북한사회를 하나로 다시 묶어내어 ‘일치단결’의 힘을 내어야 하는데 이것은 경제적으로는 군사부문에 치중된 불균형적이고 왜곡된 투자양태를 개선하고, 정치적으로는 노동당 유일지도체제로의 복귀 즉, 당의 정상화를 통해 가능한 것이 된다.

4. 시장통제와 계획의 합리화를 통한 당의 정상화

북한은 김일성의 유훈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을 기치로 하여 노동당의 유일지도체제로의 복귀를 점진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노동당의 유일지도체제의 복귀는 가장 기본적으로 국가배

27) ‘선군정치’를 앞세워 군수산업에 치중한 북한은 1998년 ‘광명성 1호’를 발사하여 장거리 미사일 능력을 과시하였으며, 2005년 제1차 핵 실험 그리고 2009년 은하 2호 발사와 제2차 핵 실험을 감행하였다. 아직 성공 여부와 사거리에 대한 논란이 전문가들 사이에 지속되고 있으나,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제조 기술능력은 제고되고 있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급체계를 다시 복구하는 것이며 일한 만큼 받아가는 보다 철저한 사회주의 배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북한은 미국과의 군사적 대결에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회복하자 2002년 7월 경제조치(7·1조치)를 취하였는데 이것은 국가배급체계가 붕괴되면서 그동안 방치·방임하였던 시장을 통제하는 것과 계획의 합리화(rationalization of planning)²⁸⁾를 통해 노동당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었다.

북한은 2002년 7·1조치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을 축소하고 국영유통망을 활성화하여 계획경제로의 회귀를 시도하였다. 이러한 북한의 계획경제로의 회귀 정책은 모든 것을 한 번에 그리고 일시에 바꾸는 충격요법 방식이 아닌 점진적인 방식으로 시행되었는데 7·1조치가 시행되고 3년이 지난 2005년 10월 북한은 쌀 판매를 금지하고, 배급제를 재개하였는데 전면적인 재개가 아니라 시장적인 요소를 계획안으로 흡수하는 조치였다.²⁹⁾ 7·1조치에서 쌀의 국정가격과 수매가격은 44원이었으나 시장에서 판매되는 쌀의 가격은 600원을 호가하고 있었다. 여기에 북한 당국이 취한 방법은 쌀 수매가격을 인상하고 동시에 물리적인 통제를 가하는 것이었다. 쌀 수매가격은 160원으로 올랐으며 식량규찰대리는 통제기구를 두어 쌀의 판매를 규제했다. 식량규찰대는 시장을 돌아다니며 1인당 쌀 판매를 50kg 이하로 제한하며 50kg가 넘을 경우 국정수매점이 강제로 국정수매가격인 160원에 쌀

28) 이것은 사회주의적 원칙을 철저히 지키면서 최대한 실리를 보장하는 방향에서 이루어졌다. 즉, 북한은 7·1조치를 통해 국가의 중앙집권적인 통일적 지도와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의 틀 내에서, 생산력 발전을 위해 개별 생산단위의 책임성과 창발성을 최대한 발양시켜 경제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키려 하였던 것이다.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 358쪽.

29)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2호(2006), 36~37쪽.

을 수매하게 된다. 한편 북한 기업소에 정상적으로 다니는 사람들은 44원에 쌀을 구매할 수 있게 해주어³⁰⁾ 노동자들이 기업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였다. 시장을 규제함으로써 배급체제를 정상화하고 노동자들이 다시 기업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해 계획 경제체제를 정상화시키려는 조치였다.

시장에 대한 규제와 통제는 2007년 이후 대폭 강화되었다. 쌀 판매 금지에 그쳤던 규제는 골목장사와 손수레 장사 금지, 시장에서 판매자(참여자) 연령 제한(40세 이상)으로까지³¹⁾ 확대되었는데 2009년 1월 1일을 기해 쌀뿐만 아니라 공산품 판매까지 금지하게 된다. 북한의 시장 통제가 어느 정도로 순조롭게 되고 있는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적어도 북한 당국의 의도는 ‘고난의 행군’ 시기에 자생적으로 확산된 시장을 당국의 완전한 규제와 통제 대상에 놓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008년을 전후해 시장 통제를 더욱 강화하였으며 2009년 5월초부터는 ‘150일 전투’를 시행하였는데 ‘150일 전투’는 2009년 계획된 모든 지표를 150일 안에 100% 이상 달성하자는 목표를 갖고 있다.³²⁾ ‘150일 전투’는 크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먼저 골목장사와 손수레장사와 같은 형태로 남아 있는 비공식적 시장을 집단주의 증산운동으로 끌어들이 시장의 잔존을 청소하겠다는 목적이다. 또 한 가지는 ‘150일 전투’에서 목표하는 지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여 인민들에게 집단주의 체제에 대한 확신을 주겠다는 목적이다. 여기에는 그동안 군에만 집중되었던 투자를 경제 각 분야로 지원할 수 있다는 판단을 배경으로 한다. 즉, 이러한 주민동원식 증산운동은 공장

30) 『조선신보』, 2005년 10월 27일.

31)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74호(2007).

32) 『노동신문』, 2009년 5월 5일.

과 농장을 가동시킬 수 있는 자원과 동원된 노동자나 농민에게 줄 수 있는 물질적 보상이 없으면 실현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 핵과 미사일 보유로 전쟁억제력이 확보되었다는 판단 아래 군에 집중되었던 자원을 민간경제에 투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가배급체계의 복귀와 보다 철저한 사회주의경제체계의로의 전환의 하이라이트는 2009년 말에 실시된 ‘화폐개혁(currency reform)’이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실시된 화폐개혁을 두고 김정일의 후계자인 김정은이 실시하였다는 설과 경제적으로 실패하였다는 설이 대두³³⁾되고 이것들이 사실로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노동당의 정상화를 추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강성대국으로의 진입’이라는 맥락에서 볼 때, 2009년 북한의 화폐개혁의 가장 큰 목적은 인플레이션을 잡고 국고를 높이는 경제적인 것보다는 정치적인 것으로 분석된다.

‘선군정치’ 속에서 북한은 군수산업에 투자를 집중하였으며 다른 분야 특히 민수경제는 방치·방임하였다. 그러므로 국가배급체계는 붕괴되었으며 북한주민들은 살기 위해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형성하여 생계를 이어갔다. 북한에서 형성된 시장은 국가의 방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담 스미스와 고전주의 학파에서 주장하는 방임주의적 자유시장에 가까웠다. 그러나 방임주의적 자유시장에서 자유경쟁은 필연적으로 승리자와 패배자를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시장에서는 소수의 승리자와 다수의 패배자를 양산해낸다. 북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다. 탈북자들과 북한소식통에 의하면 북한에는 거금을 굴리는 ‘돈주’와 상품을 독점적으로 파는 ‘거간꾼’(큰 상인)들이 존재한다³⁴⁾고 하는데 바로 이 돈주와 거간꾼들은 방임적 자유시장에서의

33)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111~116쪽.

34) 위의 책, 258~259쪽.

승리자들이다.

국가배급체계의 붕괴는 노동당 하부조직의 붕괴도 의미하는데 노동당의 중간관료들까지 이들 시장의 승리자들에게 매수되거나 일부는 스스로 자신들의 우위적 위치를 활용하여 돈주, 거간꾼으로 활동하게 된다.³⁵⁾ ‘고난의 행군’이 약 10년간 지속되면서 이들은 경제적인 부(富)뿐만 아니라 자연적으로 이것을 이용한 정치적인 힘을 갖기 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노동당 정상화를 추구하려는 김정일과 북한지도부에 잠재적으로 큰 위협이 되는 것이었다. 이런 측면에서 2009년 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화폐개혁은 바로 이들의 통제와 제거를 목표로 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당의 유일지도체제로의 복귀는 독립적으로 정치적 힘을 갖고 있거나 가질 수 있는 세력이 존재한다면 결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화폐개혁이 일반 주민들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

앞서 지적한대로 방임적 자유시장에서의 ‘돈주’와 ‘거간꾼’의 등장은 북한에서 생겨난 시장 역시 승리자와 패배자를 배출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이들 돈주와 거간꾼에게 의해 시장은 왜곡될 수밖에 없다. 시장이 소수의 의해 독점화되고 고리대금과 같은 왜곡적인 금융업이 성행하게 되면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대다수의 시장 참여자들의 경제적인 상황은 더욱 더 악화되고 열악³⁶⁾하게 되었을 것이다. 시장에서 패배에 몰린 대다수 사람들의 입장에서 돈주와 거간꾼을 일차적 표적으로 삼는 화폐개혁은 크게 또는 결사적으로 반대할 일이 아니었다. 또한, 북한당국은 시장을 축소하는 동시에 국가배급체계의 정상화 역시 추구했기 때문에 북한주민들 입장에서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35)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88~89쪽.

36)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 88~90쪽.

시장보다 일한 만큼 보상받는 체계를 선호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화폐개혁은 당의 유일지도체제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 자본가 세력을 통제 또는 제거하는 목적과 더불어 다시 유일지도체제로 끌어 들여야 할 북한주민들의 정치적 지지를 얻는 것을 목적³⁷⁾으로 이루어진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북한은 이미 사상·정치군사강국을 이루었고 경제강국의 완성만이 남았다고 하는데 경제강국 건설은 계획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국가배급체제를 복구한 바탕에서, 즉 정치적으로 노동당의 유일지도체제를 바탕으로 경제개발을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북한입장에서 자신들의 경제개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세력은 미국이다. 미국이 자신들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경제봉쇄를 하기 때문에 경제발전에 돌려야 할 투자가 국방으로 치중되어 투자가 왜곡되고 경제개발에 필수적인 통상과 대외경제협력·원조가 미국의 경제봉쇄에 막혀있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이다. 북한은 미국의 군사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추진하여 미국과의 협상을 시도하였으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입장과 태도는 공화당 정권이나 민주당 정권에 상관없이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선군정치 기간 중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다. 한 가지는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기술의 제고가 이루어져 북한이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북한을 둘러싼 경제 환경의 변화이다. 경제대국으로서 중국의 부상이 그것이다.

37) Alexander Mansourov, "North Korea: Changing but Stable," NAUTILUS NORTH-EAST ASIA PEACE AND SECURITY NETWORK(online forum) (2010.5.10): <http://www.nautilus.org/fora/security/10027Mansourov.html> - (접속일자: 2010년 5월 11일).

주지하는 바와 같이 중국은 2010년 현재 G2로 인정받는 경제대국이며 이들의 경제력은 2010년 후반기 현재 벌어지고 있는 환율전쟁에서 나타나듯이 초강대국인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 북한에서 경제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급속한 또는 압축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로부터의 자본유입과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북한의 상품과 자원을 사줄 시장이 필요하다. 중국은 바로 이러한 북한경제개발 그리고 급속한 경제성장의 조건을 부여해줄 수 있는 국가이다. 또한 북·중 간의 경제협력은 상호보완³⁸⁾적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중국과의

38) 중국 지도부는 ‘2020년 전면 소강(小康)사회 건설’을 국가 목표로 내놓았다. 소강사회는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한 중류 생활’이라는 뜻으로 13억 중국 인구 전체가 기본 생활은 충분히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중국의 경제개발을 흔히 점·선·면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이며 전면적인 개발방식이라고 한다. 현재까지 수출이 중국의 성장 동력이었으나, 소강사회는 수출만 갖고 이룰 수 없는 목표이다. 모두가 다 골고루 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았고 ‘면(面)’에 해당하는 내륙지방, 그리고 다른 국가들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서부 및 동북 지역을 개발해야 하며 경제구조를 수출에서 내수 위주로 전환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2000년부터 서부 대개발 전략을 만들고, 2008년까지 102개 프로젝트에 1조 7400억여 위안(약 297조 원)을 투입했으며 철도·항공·도로 등 교통과 물류 인프라가 새롭게 건설되면서 서부 지역의 사회기반시설(SOC)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서부 대개발의 중심이자 새로운 경제특구로 부상한 쓰촨(四川)성 청두(成都)와 충칭(重慶)시는 ‘청위(成瀾) 경제관’으로 불리며 서부 내륙의 변혁을 주도하고 있는데, 특히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중국 정부의 내수 확대 정책으로 서부 내륙은 새로운 내수 시장으로 부상했다.

이제 남은 것은 동북3성(랴오닝, 지린, 헤이룽장)과 내이멍구(內蒙古)자치구가 위치한 동북지역이다. 중국정부는 이른바 ‘동북노공업기지진흥전략(동북진흥계획)’을 2003년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립하고 동북3성 경제 재건을 집중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이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서부 개발에서 거점이 된 청두와 충칭 시와 같은 거점이 없다는 것이다. 육로로 베이징과 상하이로 연결하는 것은 거리상 효율적이지 않고 바다로 나아가는 항구도 랴오닝성의 다롄과 장허 등에 국한되어 있다. 중국은 동북3성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북한의 나진, 선봉, 청진, 신의주, 그리고 205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압록강 하중도(河中島)를 활용해야 하는데 이렇듯 중국 동북 개발과 북한 개발은 높은 상관관계

경제협력은 북한의 주체노선에 크게 손상을 주지 않는, 즉 북한의 주체노선을 유지하면서 경제발전을 진행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 결국 북한으로서는 자신들의 목표인 2012년 경제대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 나설 수밖에 없는 것이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현실화하기 위해 2010년 5월 초 그리고 제3차 당대표자회의가 있기 바로 직전인 2010년 8월말에서 9월 초 중국을 방문하여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그리고 중국 지도부와 회담을 하였다. 김정일의 2010년 두 차례 방중에서 북한과 중국 양국 간의 가장 중요한 의제는 경제협력이었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위원장은 8월 말 방중 기간 항일 유적지와 함께 창춘, 지린, 투먼 등 이른바 ‘창지투(長吉圖) 개발·개방 선도구’의 산업시설을 시찰했다. 북·중간에는 2009년 10월 원자바오 중국 총리의 방북에서 이미 북한 신의주 개발을 포함하는 ‘연해경제벨트경제권’과 및 ‘창지투 선도구’와 관련한 합의가 이루어져 신압록강대교 건설과 중국의 나진항 진출 등이 시간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지난 5월 북·중 정상회담에서 큰 틀의 논의가 있었으며, 그 후 7월말 양국 간 경제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이 맺어졌는가 하면 후정웨이(胡正躍)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이끄는 고위급 대표단이 방북해 협의를 진전시키기도 했다.³⁹⁾ 2010년 9월 2일 『노동신문』 사설은 김정일 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한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를 가지고 있다.

39) 황방열 기자, “눈길 끄는 김정일의 중국 이동 루트,” 『오마이뉴스』(2010.8.29):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438103 - (접속일자: 2010년 8월 29일).

… 사회주의 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중 두 당, 두 나라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을 힘 있게 추동하는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두 나라 인민들에게 커다란 기쁨과 고무를 안겨주고 있다. 우리 인민은 새로운 신심과 낙관에 넘쳐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치고 있다. 사회주의 조선의 시조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00돌이 되는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웅대한 구상은 현실로 펼쳐지고 있다.

위의 노동신문 사설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열기 전, 김정일은 ‘강성대국’ 건설의 마지막 남은 고지라고 하는 경제강국 건설에 필수적인 중국과의 경제협력의 틀과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 할 수 있다.

5. 제3차 당대표자회의 의미와 수령체제 이후의 북한정치체제

북한의 당규약 제30조에 따르면 “당대표자회의에서는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전술에 관한 긴급한 문제들을 토의 결정하며, 자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한 당중앙위원회 위원, 후보위원 또는 준후보위원을 제명하고 그 결원을 보선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가 당대회와 당대회 사이에 당대표자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지난 9월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의는 1980년 10월 10일에서 14일까지 열린 제6차 당대회 이후 열리는 것으로 앞으로 열릴 제7차 당대회의에 대비한 일종의 사전 조율 및 준비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이 지난 9월 28일에 열린 제3차 당대표자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어 그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으나 당대표자회의의 당규약 제30조 명시된 두 가지 안건 중 인원충족문제는 제6차 당대회 이후 30년 동안 공식적으로는 최고지도기관 선거가 없었음을 감안(당시 선출된 당 중앙위원 145명 가운데 77명이 사망 또는 해임되었고 지금은 68명만 남았다. 그나마도 대부분 70~80대의 고령으로 사실상 활동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하였을 때, 매우 절박하지만 자연스러운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더욱 중요한 토의·결정 내용은 당의 노선과 정책 및 전략 전술에 관한 것, 즉 강성대국 건설을 위한 당의 정상화였을 것으로 추측된다.⁴⁰⁾

북한은 제3차 당대표자회의가 진행 중인 지난 9월 28일 ‘조선중앙TV’를 통해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라는 중대 방송을 내보냈다. ‘중대 방송’이라는 방송의 성격을 고려해 볼 때 이 방송이 제3차 당대표자회의의 내용을 세세히 그리고 면밀히 담아내고 있지 못하지만, 당대표자회의 내용의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당대표자회의의 열린 정황을 고려하여 방송의 전문을 분석하여 보면 회의에서 결정된 주요 내용을 엿볼 수 있다.

방송 전문의 첫 문장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 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시기에 소집된 조선노동당 대표자회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40) 지난 6월 30일자 『로동신문』은 “조선노동당의 영도는 선군혁명의 생명선이며 민족만대의 번영을 위한 근본 담보”라면서 “이번 당대표자회의를 계기로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영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고 우리의 강성대국 건설에서는 보다 큰 비약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제3차 당대표자회의의 의미를 부여하였다.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높이 추대했습니다”로 시작되는데 여기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역사적 시기”란 사상·정치·군사강국을 이미 이루어 놓은 북한으로서 경제강국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틀을 마련하고 국가배급체계를 복원하는 시기로 해석된다.

이어 전문에는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를 조선노동당 총비서로 추대한 것은… 우리나라를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과학기술강국으로 전변시키시었으며… 김정일 동지의 노숙하고 세련된 영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절대불변의 신념과 의지를 뚜렷이 과시하는 일대 정치적 사변으로 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역시 김정일의 영도 아래 강성대국의 세 가지 고지 중 사상·정치 그리고 군사 강국의 고지가 이미 점령되었으며 남은 것은 이제 경제 강국의 고지임을 암시한다.

또한 전문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견결히 옹호 고수하고 빛내며 선군혁명 위업을 끝까지 완성해 나가려는”이란 대목이 나오는데 이것은 김정일의 영도아래 김일성의 유훈을 완성해나가야 하는 것이 김정일을 당 총비서로 추대한 가장 중요한 이유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여기서 김정일의 영도란 김정일 개인의 영도가 아니라 노동당 총 비서로서의 영도가 되므로 당의 영도 속에서 김일성의 유훈을 관철시키겠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 점은 전문의 마지막 부분⁴¹⁾에서 더욱 분명히 하였다. 이렇듯 중대 방송에

41) “...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신 위대한 김정일 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노동당의 영도 따라(필자 강조) 나아가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 것이며...”

나타난 제3차 노동당 당대표자회의 내용의 전반적인 윤곽의 골자는 당 조직의 복원이며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당의 정상화를 공식적으로 알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확인된 또 다른 중요한 점은 김정일의 위상에 관한 것이다. 김정일은 위대한 영도자로 표기되고 있으나 ‘수령’이라는 명칭은 김일성에게만 지칭되었다. 일반적으로 어느 후계자든지 후계자라면 두 시기를 갖게 된다. 먼저 전임 지도자(북한의 경우 ‘수령’)의 사업(북한의 경우 혁명위업)을 보좌하는 시기와 전임 지도자의 지위를 승계하여 행사하는 시기, 즉 실질적 수령이 되는 시기이다. 그러나 김정일은 자신의 지위와 역할을 여전히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하고 완성하는 후계자의 지위와 역할에 한정시키고 있다. 즉, 김정일은 자신의 통치기반을 여전히 수령의 유훈통치에 두고 있으며 김일성의 유훈 계승과 완성을 국가가 추구해야 할 유일한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⁴²⁾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를 선출할 수 없다. 후계자를 선출하는 것은 수령에게만 있는 고유한 역할이기 때문이다.⁴³⁾

그렇다면 지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급부상한 김정일의 3남인 김정운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 앞에서 분석되었듯이 수령의 후계자로

42) ‘후계자론’에서는 후계자의 세 번째 역할을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 것이다”라고 정리하고 있다. 김일성 혁명위업의 완성은 결국 김일성 유훈을 실천하는 것이다. 김정일은 김일성의 최대 유훈으로 ‘강성대국’ 건설을 들고 있다. 그러므로 김정일은 자신의 대에, 자신의 생존기간 내에 최소한 강성대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것의 가장 중요한 분기점, 즉 강성대국의 대문을 여는 시점을 2012년으로 잡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박일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 원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217쪽.

자신을 규정한 김정일은 수령이 아니기 때문에 후계자를 둘 수 없다. 만약 김정일이 김정은을 수령의 후계자로 선출하였다면 그것은 자신이 구축하여 놓은 주체사상과 수령체제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 된다. 또한 이것으로 김정일은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제도적 정당성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북한을 통치할 수 있는 정당성도 잃게 된다. 김정일이 이러한 모순과 이에 따른 위험을 감안하면서까지 자신의 자식에게 수령의 자리를 세습한다고 보기에는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그러나 김정일은 2010년 현재 일흔을 바라보는 노인이다. 김정일이 자신의 아버지인 김일성과 비슷한 수명을 누리다 하더라도 그가 육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시기는 10년 안팎으로 한정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상기 분석되었듯이 김정일은 수령의 자리에 오르지 않고 수령의 후계자로서 생을 마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후계자로서 수령의 혁명위업을 완성해야 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 수령의 혁명위업은 김일성의 유훈으로 정리되는데 김정일은 김일성의 최대유훈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에 역점을 두고 있다. 강성대국 건설이 나머지 두 유훈(한반도 비핵화, 조국통일)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고리⁴⁴⁾로 보기 때문이다.

상기 분석되었듯이 김정일은 생전 최소한 강성대국 건설의 토대를 만들려고 하고 있다. 김일성의 최대 유훈이라는 강성대국 건설이 궤도에 오른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는데 하나는 북한 국내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또 하나는 북한을 둘러싼 국제 환경문제, 즉 미국과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북한의 왜곡적

44) 김정일, “올해를 강성대국의 위대한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 452~453쪽.

인 전체주의 정치체제인 수령체제는 다른 무엇보다도 북한이 미국이라는 초강대국과 군사적 대립이 증폭·가중되면서 나온 것이다. 김일성의 세 가지 유훈 모두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청산 또는 개선이라는 전제조건 속에서 실현가능한 것이다. 김일성의 유훈이 실현된다는 것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해결된다는 것이며 북한이 보다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되었을 때 논리적으로 수령체제는 북한에서 그 유용성의 실효기간을 다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수령체제를 만든 장본인인 김정일의 입장에서 자신의 사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수령과 수령의 후계자가 없는 수령체제는 지속가능한 체제가 아니다.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문을 연다는 북한의 주장은 물론 아직까지는 희망사항일 수 있다. 그러나 수령의 후계자가 더 이상 생존하지 않는 상황을 대비하는 것은 북한으로서는 그리고 김정일로서는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문제이다. 만약 김정일의 바람대로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었을 경우역시 북한의 정치체제에는 변화가 요구된다.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청산되었다 하더라도 북한은 사회주의를 포기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북한이 건설하려는 강성대국이 그냥 강성대국이 아닌 ‘사회주의 강성대국’임에서도 확인된다. 그렇다면 북한이 그리고 김정일이 고려할 수 있는 수령체제 이후의 정치체제는 무엇이 있을까?

당의 유일영도체제로 운영되는 사회주의국가에서 당의 집단지도체제는 일반적인 형태이다. 중국도 마오쩌둥이 대중의 수령으로 등장한 ‘문화혁명’과 전환기에 덩샤오핑이 군에 기반을 둔 실질적(de facto) 수령으로 활동한 이후 집단지도체제로 공산당을 운영하며 경제개발을 이끌어내고 있다.⁴⁵⁾ 자신의 사후 그리고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을

고려한 김정일이 구상하고 있는 북한의 정치체제는 노동당의 영도를 정치전면에 복귀시키고 노동당을 집단지도체제로 운영한 이외에는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은 노동당 창건 65주년 축하사절로 방북한 저우융캉 중국공산당 상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조중(북중)은 고위층이 상호 방문하는 좋은 전통을 계승해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본인을 비롯한 중앙 영도집단 구성원들은 중국에 자주 가보고 싶다”며 “얼마 전 열린 당 대표사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돼 젊고 실력 있는 동지들로 받아들여 중앙 영도기구를 완비하게 됐다”⁴⁶⁾고 말하였는데 지난 3차 당대표사회회의가 당을 집단지도체제로 구축하기 위한 사전포석이었다는 추측을 가능케 하는 대목이다. 만약 김정일이 이러한 집단지도체제를 구상하고 있다는 가정이 타당성 있다면 김정일의 급부상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북한은 수령체제에서 당의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점증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정치체제의 전환은 항시 불안정성을 동반한다.⁴⁷⁾ 김정일의 부상은 김정일이 수령체제에서 집단지도체제로의 전

45) 김정일은 북한 노동당 창건 65주년 축하사절로 방북한 저우융캉 중국공산당 상무위원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 동지들과의 교류를 강조하고 진심으로 중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여기서 김정일이 언급한 “중국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YTN, “중국, 북한 새 지도부 지지… 방중 요청”(2010.10.12): http://www.ytn.co.kr/_ln/0104_201010120815190695 - (접속일자: 2010년 10월 14일)]는 것은 무엇보다 중국의 경제개발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있는 중국공산당의 집단지도체제를 배우겠다는 것으로 해석되는 부분이다.

46) 이재영, “김정일, 中 후진타오 방북 희망한다.” 『이투데이』(2010.10.11):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TM=news&SM=3099&idxno=365486> - (접속일자: 2010년 10월 14일).

47) 이것은 스탈린의 유일지도체제에서 흐루시초프를 중심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로 전환하는 시기에 구소련에서 목격되었으며 문화혁명시기 대중의 수령인 마오쩌둥에서 덩샤오핑의 개혁체제로 전환되는 기전 광란의 ‘4인방’체제를 거친 중국에서도 목격되는 바이다.

환을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지금까지 구축되어 온 북한 수령체제에서 수령의 후계자로서 김정일은 우상화되었다. 더욱이 현재 북한이 자신들을 규정하는 ‘김일성민족’의 시조인 김일성의 큰아들로서 김정일은 통치의 ‘전통성(traditionality)’⁴⁸⁾을 갖고 있다. 김정일의 아들이고 김일성의 손자인 김정은 역시 이러한 전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전통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불안정할 수밖에 없는 전환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이끌려는 의도이다. 김정일은 자신의 아들인 김정은을 집단지도체제의 핵심적인 자리에 위치시킴으로써 수령의 유일지도체제에서 노동당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에서 올 수 있는 불안정성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

김정일의 권력은 김정은에게 세습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북한의 정치체제가 수령체제에서 노동당 집단지도체제로 전환될 것임을 가정할 때, 왕의 권력이 왕세자에게 세습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습이다. 이러한 가정은 무엇보다 북한과 미국의 적대적 관계가 개선되었을 때 가능한 이야기이다. 북·미 간의 적대적 관계가 변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서는 하고 싶어도 실행할 수 없는 계획(scheme)일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2012년 강성대국의 문을 활짝 열어제끼겠다’는 북한의 주장은 매우 낙관적인 전망⁴⁹⁾에 근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8) 막스 베버는 조직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권한관계가 명확해야 하며 권한은 정통성(legitimacy or orthodoxy)을 가져야 한다고 하였다. 베버는 권한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그중 두 번째가 전통적 권한이다. 이는 전통과 관습에 의해 만들어진 권한으로 오랜 역사적 전통에 대한 신뢰에 의해 합법성이 부여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존속해온 것에 대해서는 의심 없이 무의식적으로 권한을 인정하게 된다. Max Weber,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49)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고는 강성대국의 문을 열기 어렵다.

6. 나가면서

김정일은 1980년 제6차 당대회에서 중앙위원회 위원, 정치국 상무위원, 비서국 비서, 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되었으며 공식적으로 김일성의 유일 후계자로 추대된다. 김정일이 노동당에서 일을 시작한 후 16년 만의 일이었다. 16년간 김정일은 먼저 노동당을 유일사상체제로 묶어내어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로 만들어냈으며, 통제를 벗어난 군을 군내 노동당의 입지와 통제를 강화시켜 군을 수령의 군대로 만들어냈다. 당·군·정을 관통하는 유일지도체제로 묶어낸 것이다. 김정일은 ‘혁명적 수령관’과 ‘사회정치적 생명론’ 그리고 여기에 민족주의담론을 연결시킴으로써 김일성을 신격화하고 북한사회를 보다 완벽한 수령제사회로 만들려고 하였다.

김정일의 후계체제는 곧 북한을 김일성의 유일지배체제로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해 이것은 노동당을 기반으로 그리고 노동당 조직을 통해 북한의 군·정을 장악하는 것이고 나아가 북한 전역을 장악하여 유일지배체제로 만들어 북한을 일치단결된 사회로 만드는 것이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소련과 사회주의권의 몰락은 누적된 북한 경제문제의 심각성을 증폭시키고, 북한이 자신의 안보를 혼자 짊어지고 나가야 하는 안보위기를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북한은 ‘선군정치’라는 비상체제를 가동시켜 안보문제를 일차적으로 해결하려하였으며 노동당의 유일지도체제는 퇴색될 수밖에 없었다.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 기술을 제고한 북한은 2002년 7·1조치를 기점으로 노동당의 정상화를 점진적으로 추진하며 ‘강성대국’ 건설에서 마지막 남은 고지라는 경제강국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정일은 중국과의 경제협력을 추진함으로써 경제강국 건설의 토대를 마

련하였으며 제3차 당대표자회의를 통해 국가경영에서 ‘당의 영도’로의 복귀를 공식화하였다.

김정일은 경제강국 건설, 즉 북한의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는 분기점을 2012년 김일성 탄생 100주년⁵⁰⁾으로 설정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북한의 목표는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개선⁵¹⁾되었을 때 가능한 일이다. 천수를 다한다 하더라도 육체적인 수명이 제한되어 있는 김정일로서 자신의 사후 상황을 고려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김정일이 구축하여 놓은 수령체제는 수령의 후계자인 김정일이 육체적 수명을 다할 때 그리고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가 개선되는 외부적 환경에 변화가 있을 때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그 유용성의 실효기간도 끝나게 된다. 자신을 수령 김일성의 후계자로 확고히 규정하고 있는 김정일은 수령의 후계자를 둘 수 없다. 후계자 선정은 수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수령 고유의 영역이며 이것이 부정된다면 김정일 통치의 정당성도 부정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이 고려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 향후 북한정치체제를 결정하는 김정일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많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볼 때 지난 제3차 당대표자회의에서 약관 28세의 나이로 인민군 대장 그리고 당 중앙위 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김정일의 3남 김정은의 등장은 북한이 김정일 후계체제인 수령 유일지도체제에서 노동당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을 보다 안정적이고 순조롭게 이루

50) 일반적으로 100년은 한 단체, 기관 또는 조직의 영속(永續)성을 의미한다.

51)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지난 2010년 11월 23일 연평도에 포격을 가한 북한의 도발은 무시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는 미국의 관심을 다시 끌어보겠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미국에 북방한계선(NLL) 문제를 다시 부각시키고 군사적 대치 상황을 상기시켜 자신들의(북한의) 문제를 미국의 외교의 우선순위에 넣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려는 목적에서 나왔을 것으로 분석된다.

김정일 후계체제인 수령 유일지도체제에서 노동당 집단지도체제로의 전환의 성공여부는 미국과의 관계 개선 여부와 북한 경제개발의 속도와 성과에 달려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북한 측에서 추진하는 것은 김정일이다. 이 글에서 제시하는 가정과 분석이 일말의 타당성을 갖는다면 김정일은 자신이 김일성 유일지도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올인’하였듯이 노동당 집단지도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올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김정일은 2010년 현재 70세를 바로 보는 노인이며 그의 건강은 그의 나이와 상반관계(negative correlation)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점과 체제전환은 그 어떤 것이든 무엇보다 시간이 요함을 고려할 때 북한 통치에서 전통성(traditionality)과 정당성(legitimacy) 모두를 가지고 있는 김정일이 ‘얼마나 건강하게 오래 살 것인가’는 노동당 집단지도체제가 ‘안착할 수 있는가’와 매우 높은 상관관계(positive correlation)를 갖고 있다고 하겠다.

■ 접수: 10월 22일 / ■ 채택: 11월 26일

참고문헌

1. 북한자료

- 김정일, 『김정일선집』(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1998).
- _____, “우리는 지금 식량 때문에 무정부 상태가 되고 있다”(1996.12.7), 『월간조선』, 4월호(1997).
- 김재호, 『김정일강성대국 건설전략』(평양: 평양출판사, 2000).
- 김창하, 『불멸의 주체사상』(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리원경, “현 시기 나라의 통화조절분야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원칙적인 문제에 대하여,” 『경제연구』, 제2호(2006).
- 박일범, 『주체사상의 사회력사원리: 위대한 주체사상 총서』, 2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총서』, 1~10권(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조선로동당중앙위원회 당력사연구소, 『조선로동당력사』(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1).
- _____, 『김정일동지 력전』(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9).

2. 국내자료

- 김유민, 『후계자론』(서울: 신문화사, 1984).
- 김재천, 『후계자문제의 이론과 실천』(서울: 1989).
- 박영자, “분단 60년, 북한의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역할과 관계, 그리고 역사를 중심으로,” 『인문연구』, 48호(2005).
- 박후건, 『유일체제 리더십: 잭 웰치, 이견희, 김정일 리더십의 비밀』(서울: 선인, 2008).
- 서대숙, 『현대북한의 지도자: 김일성과 김정일』(서울: 을유문화사, 2000).
- 양문수, 『북한경제의 시장화』(서울: 한울아카데미, 2010).
- 이관세, 『현지지도를 통해본 김정일의 리더십』(서울: 전략과 문화, 2009).
- 이교덕, 『북한의 후계자론』(서울: 통일연구원, 2003).
- 이승열, “북한 ‘수령체제’의 변화와 ‘수령승계방식’의 한계에 관한 연구”(경남

- 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 이종석, 『조선로동당연구』(서울: 역사비평사, 1995).
- 이찬행, 『김정일』(서울: 백산서당, 2001).
- 이태섭, 『북한의 경제위기와 체제변화』(서울: 선인, 2009).
- 임수호, 『계획과 시장의 공존』(서울: 삼성경제연구소, 2008).
- 장달중, 이즈미 하지메 공편, 『김정일체제의 북한』(서울: 아연출판부, 2004).
- 정영철, 『김정일 리더십 연구』(서울: 선인, 2005).
- 정창현, 『CEO of DPRK: 김정일』(서울: 중앙북스, 2007).
- 좋은벗들, 『오늘의 북한소식』, 제74호(2007).
- 최봉대·구갑우, “북한의 공(公)과 사(私): 이론화를 위한 비교” 『현대북한연구』, 11권 2호(2008).
- 현성일, 『북한의 국가전략과 파워엘리트: 간부정책을 중심으로』(서울: 선인, 2007).

3. 국외자료

Weber, Max, *Economy and Society*(New York: Bedminster Press, 1968).

Leadership Succession in the DPRK and the Prospect of Changes in Political System after Kim Jong Il

Phillip Park(Kyungnam University)

This article seeks to shed light on the systemic options for and limitations to the succession of power in North Korea. This article proceeds from the perception of North Korea's 'Suryong' system as a unique form of totalitarian system, not as a monarchy. It argues that the main architect of Suryong system, Kim Jong Il can not have a successor because of the system's unique characteristic in which the source of all the legitimacy in North Korea is coming from supreme leader Kim Il Sung. In this light, the third delegate's meeting of the Worker's Party of Korea (WPK) on September 28, 2010 should be not be viewed as power succession from Kim Jong Il to his third son, Kim Jong Eun. With limited options considered, the political system of North Korea after Kim Jong Il, whose life time is numbered, would be one similar to that of China after Mao and Deng; "Rule by the Party" in which

a collective leadership with a first among equals at the top is the direction that North Korea and Kim Jong Il is seemed to be heading.

Keywords: Kim Jong Il, Succession of leadership, Monolithic (Suryong) System, Collective leadership